

보 도 해 명 자 료 (‘15.7.1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환경부, 검토의견 냈지만 산업부 묵살
(‘15.7.15. 경향)

1. 기사내용

- 환경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부처 협의과정에서 전기요금 전망에 사회적 비용 미고려, 수요예측 및 적정예비율 과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산업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① ‘전기요금에 사회적 비용을 미고려’라는 주장 관련

- 기준수요의 전제가 되는 전기요금을 전망시, 전기요금에 미치는 요인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며, 사회적 비용은 수요관리목표 설정시 이미 반영하였음
 - 7차 수급계획은 미래 전기요금 전망시 국제기구나 기관의 연료비 전망 및 전원믹스를 고려하여, 총괄원가에 대한 실제 시뮬레이션에 근거하여 전기요금 전망치를 예측하였으며,
 -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시, 전기의 생산·수송·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* 등을 감안하여 전기요금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목표치를 도출하였음
- * 2차 예기본에서 논의되었던 송전망 주변지역 보상비용, 온실가스 감축 비용 등 환경·사회적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
- * 수요관리목표치: '29년 기준 전력소비량 14.3%, 최대전력 12% 절감

- 1 -

② ‘전력수요가 과다책정’이라는 주장 관련

- 최근의 낮은 전력수요 증가율은 공급부족에 따른 범국민적 절전 참여와 강도높은 수요관리, 평년보다 온화한 기상여건 및 전기요금 인상 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바 이를 구조적인 전력수요 둔화로 보기 어려움
- 또한, 전력소비량은 낮은 증가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, 최대전력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
- * '14년의 경우 전력소비량은 전년대비 0.6% 증가했으나 최대전력은 4.7% 증가
- 7차 전력수급계획의 수요전망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모델에 입각하여 전문가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전망한 것이며,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장기 수요전망과 부합하는 예측임
- * 2차 예기본: 656,770GWh, 7차 수급계획: 656,883GWh (목표수요 기준)
- 수요예측이 원전 10기 분량만큼 과다하다는 것은 이번 수급계획에 반영된 신규원전 2기 외에도, 기존에 가동중이거나 계획 중인 발전소 8기를 폐쇄해야 한다는 것으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음

③ ‘설비예비율 22%를 6차계획 이전수준인 18%로 하향조정 필요’라는 주장 관련

- 7차 수급계획은 별도의 공급불확실성 대응물량을 반영하지 않아, 사실상 5차와 6차 예비율보다 하향 조정된 수치임
- 과거 계획에서는 불확실성 대응물량까지 별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26~28%에 이르는 예비율을 확보

- 2 -

< 수급계획별 적정예비율 수준 및 불확실성 대응설비 반영여부 >

계획수립 년도/기간	LOLE (일/년)	설비예비율 목표 (%)	수급계획 최종년도예비율	불확실대응설비 반영규모	예비율*
3차 '06 ('06~'20)	0.5	20	22.8	불확실대응설비 : 3250MW	27.3%
4차 '08 ('08~'22)	0.5	22	23.3	불확실대응설비 : 4100MW	28.3%
5차 '10 ('10~'24)	0.5	18	18.2	불확실대응설비 : 7300MW	26.2%
6차 '12 ('13~'27)	0.3	22	17.7	불확실대응설비 : 3900MW	26.5%
7차 '15 ('15~'29)	0.3	22	21.6 (고리1호기 제외)	미고려	-

* 불확실 대응설비 물량까지 고려한 예비율

☐ 22% 예비율은 공급신뢰도 확보를 위한 최소 설비예비율 (15%)과 수급 불확실성(7%)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임

- 발전소, 송전선로 건설지연, 수요관리 목표달성 차질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최소한의 불확실 대응을 위한 7% 예비율이 필요하며,
- 예비율 22%는 미국,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과도한 수준이라 할 수 없으며, “계통섬”인 국가적 특성도 고려할 필요

④ ‘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LNG발전 비중 확대필요’ 라는 주장 관련

☐ 7차 수급계획은 Post 2020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존 석탄화력발전 4기를 철회하고, 신규 원전 2기를 추가하는 등 저탄소 전원믹스를 구성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음

☐ 우리나라의 LNG 발전은 ‘14년 기준 발전량의 21.4%, 발전설비의 28.7%로 이미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

- 전원구성은 경제성과 환경성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, LNG발전은 높은 발전원가로 인해 전기소비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바 침두수요 위주로 가동하는 것이 경제적

* 한국 : 천연가스 (145.54원/kWh), 석탄(37.02원/kWh) (연료비단가, ‘14년 평균)

- 3 -

⑤ 부처간 협의 관련

☐ 이번 수급계획 관련 환경부의 공식적 의견조회 외에도 환경부 담당국장과의 사전협의(5.22), 관계부처 국장급회의(5.26), 제12차 에너지위원회(6.12, 환경부 차관 참석)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

※ 관련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이원주 과장(044-203-4040)
이동철 사무관(044-203-4049)